

갈길 먼 광주 성평등 정책...임금 차별·男 육아휴직 예산 '0'

최지현 시의원, 여성 시간당 평균 임금 1만6658원...남성의 78% 불과
박미정 시의원, 남성육아휴직 조례 제정 1년...사업 추진 한 건도 없어

광주시의 양성평등 정책이 부실하게 운용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광주지역에서 성별 임금격차는 해소되지 않고, 남성 육아휴직 조례가 제정돼 있지만 운용예산은 배정되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다.

10일 더불어민주당 최지현(광산 1선거구) 광주 시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실시한 광주시 주요업종 성별임금격차 실태조사결과 일부 업종에서 여성 시간당 평균임금이 남성의 70%대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광주지역 제조업, 도·소매업, 숙박·음식업, 건설업 등 업종에서 최근 3개월 임금 기준 성별 임금 격차는 22.3%, 시간당 임금 기준 성별격차가 21.7%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여성의 시간당 평균임금이 1만6658원으로 남성 2만1265원의 78.3% 수준에 불과하다.

최 의원은 "여성가족부의 2024년 지역성평등보고서에서 광주의 성별임금격차는 전국 17개 시도 중 13위로 노동시장에서 광주시 여성의 노동권이 상당히 제한받는 상황"이라며 "조례 개정을 계기로 광주시가 공공영역뿐만 아니라 민간영역에서도 성평등한 임금환경을 선도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 의원은 성평등 임금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광주시 성별임금격차 개선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날 환경복지위원회에서

원안 의결된 개정안에는 광주시가 2년마다 성별임금격차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결과를 시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도록 규정하는 내용이 담겼다.

광주시가 남성육아휴직 조례를 제정한지 1년이 지났지만 관련 사업을 한 건도 추진하지 않은 사실도 드러났다.

더불어 민주당 박미정(동구 2선거구) 광주시 의원은 이날 열린 여성가족국 결산심사에서 "조례가 시행된 지 1년이 넘도록 단 한 건의 사업도 추진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광주시 남성 육아휴직 장려 및 활성화 조례'는 지난 2023년 제정됐다. 성평등한 돌봄 문화를 조성하고, 아버지의 육아 참여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서다.

박 의원은 "정책의 방향성과 기반은 이미 마련됐지만, 광주시는 이를 실행할 의지가 없다"며 "성평등한 돌봄의 첫걸음인 남성 육아휴직 정책부터 제대로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광주시는 저출생 극복을 위해 지난 한 해에만 2919억 원의 예산을 편성했으나, 출생아 수는 2022년 7446명 → 2023년 6172명 → 2024년 6043명으로 지속 감소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박 의원은 지적했다. 실제 2024년 광주지역 합계출산율은 0.70명으로 전국 평균(0.75명)에도 못 미치며 서울·부산에 이어 전국 최하위권에 머물렀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다시, 민주주의”...민주화운동기념관 개관

10일 서울 용산구 민주화운동기념관에서 열린 제38주년 6·10민주항쟁 기념식에서 참가자들이 개관 세리머니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광주시, 고시원 수도요금 '세대 분할' 가능

가정용 요금 적용...20~30% 감면 효과

광주시가 고시원 세대별 수도요금 분할 납부를 허용해 학생 거주자들의 부담을 낮춘다.

10일 광주시에 따르면 고시원의 각 호수별 세대를 분할해 수도요금의 일부를 가정용으로 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했다.

고시원 수도요금 세대분할을 허용해 고시원 이용자들의 요금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조치다.

그동안 고시원은 '영업'으로 분류돼 일반용 수도요금을 적용받아왔다. 수도요금이 고시원 전체 수도요금이 입주자에게 부과되면 입주자가 각 호수별로 분할해 걷어 납부를 해온 것이다.

하지만 다세대가 모여 사는 구조의 다중생활시설로 준주택인 점을 고려해 수도계량기가 하나인 고시원이 세대분할을 할 경우 수도물 사용량 15

m³까지는 가정용 요금으로 부과할 수 있다.

이럴 경우 일반용 요금 누진제 적용 때보다 약 20~30% 가량의 요금 절감 효과를 볼 수 있다. 다만 고시원 세대분할을 신청하려면 고시원 거주자의 전입신고가 필수다. 또 고시원에 거주하는 저소득 세대(의료급여 1종 수급권자)는 매월 사용량의 10m³ 이내에 해당하는 상수도 요금(최대 5800원)을 추가 감면받을 수 있다.

고시원 운영자가 소재지 행정복지센터에서 주민등록 등재 여부를 확인받아 상수도사업본부 지역사업소에 세대분할을 신청하면 된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포스코퓨처엠, 광양 전구체 공장 준공

올출산단 내 연 4만5000t 생산 규모...배터리 산업 활력 기대

포스코퓨처엠의 광양 전구체 공장이 완공돼 국내 배터리 산업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된다.

포스코퓨처엠은 지난 10일 광양시 올출산단지에서 연간 4만5000t 생산 규모의 전구체 공장 준공식을 개최했다.

이날 준공식에는 정인화 광양시장, 엄기전 포스코퓨처엠 대표, 최대원 광양시의회의장, 천성래 포스코홀딩스 사업시너지본부장, 구충곤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장을 비롯한 관계자 70여명이 참석했다.

전구체는 원하는 구조의 물질이 되기 전 단계를 일컫는 것으로, 배터리 산업에서는 양극재가 되기 전 단계의 물질로써 배터리의 핵심 소재이다. 니켈·코발트·망간 등으로 구성된 전구체는 양극재 공장에서 리튬과 결합해 양극재가 된다.

이날 공장 준공에 따라 그간 대부분 중국산에 의존했던 전구체를 국내 자체 생산함으로써 양극재 품질 관리와 안정된 공급망 구조를 구축하는 계기가 됐다.

특히 전구체가 원료 비중과 생산 방식에 따라 특성이 변하고, 불순물 관리가 중요한 만큼 보다 철저한 품질관리가 가능하게 됐다.

광양 전구체 공장은 기존 포스코퓨처엠 광양 양극재 공장 부지 내 총 2만2400㎡(약 6800평) 규모로 조성됐다. 연 전구체 생산 규모는 4만5000t이며, 이는 전기차 약 50만대의 배터리를 만들 수 있는 양이다.

광양 공장에서 생산되는 전구체는 모두 LG에너지

솔루션과 제너럴모터스(GM)의 배터리 합작법인인 엘티엠셀즈로 공급돼 양극재 제조에 사용된다.

아울러 광양 전구체 공장은 중국 의존도(지난 3월 기준 90% 이상)가 높은 국내 전구체 공급망 구조를 변화시킬 핵심 기지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사실 올해부터 중국 전구체를 사용하면 미국 시장에 판매하는 배터리에 외국우려기업(FEOC) 규정이 적용돼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에 따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기 때문에 높은 중국 의존도는 위험요인으로 꼽힌다. 최근 미국 하원의 감세 법안 추진 등으로 IRA 세액 공제에 대한 정책 변화 가능성이 크지만, 금지 외국법인 요건 신설 등 미국의 중국 공급망 규제는 더욱 강화되는 추세이다.

포스코퓨처엠은 전구체의 핵심 원료인 니켈을 비중국산 원료를 바탕으로 공급받는 체계도 갖췄다. 포스코가 비중국산 니켈 원료로 고순도 황산니켈을 만들어 포스코퓨처엠 전구체 공장에 공급하는 구조이다. 이차전지 재활용 회사인 포스코HY 클린메탈을 통해서도 황산 니켈을 공급받는다.

엄기전 대표는 기념사를 통해 "이번 공장 준공으로 원료·반제품·양극재에 이르는 지급체제를 완성했다"면서 "광양 전구체 공장은 국내 배터리 산업 경쟁력 강화와 성장에 기여할 것이다"고 밝혔다.

정인화 시장은 축하사에서 "광양시는 이차전지 기회발전특구 지정을 통해 이차전지 소재산업의 전주기 생태계 조성을 추진하고 있다"면서 "앞으로 인프라, 인력, 정주 여건 등에 전폭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광양=김대수 기자 kds@

지방정가 라운지

서동욱, 전남도 재난관련기금 전략적 운용 촉구

재해구호·재난관리기금 집행 저조

서동욱(민주당·순천4·사진) 전남도의회 의원이 "전남도의 재난관련 기금이 방치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서 의원은 지난 9일 열린 '2024 회계연도' 도민안전실 결산 심사에서 도의 재해구호기금과 재난관리기금의 낮은 집행률을 지적하며, 기금의 전략적인 운용을 강조했다.

서 의원은 지난해 전남도의 재해구호기금은 296억원, 재난관리기금은 420억원 규모로 크지만 재해구호기금 집행률은 6.6%(19억원)에 불과했고, 재난관리기금도 58%(243억원)에 그치는 등 활용되지 않고 있다고 했다.

서 의원은 "기금의 특성상 재난이 발생하지 않으면 집행이 어려울 수 있다는 점은 이해하지만 현재



적립액은 법정 최소적립액을 훨씬 초과한 상태"라며 "이 같은 상황이 지속되면 '쓰지도 않는 돈을 왜 쌓아두는가'라는 의문과 함께 도민의 불신을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타 지자체에서는 초과적립된 기금을 활용해 재난예방형 사업이나 사회적 약자 지원 등에 적극 투자하고 있다"며 "전남도 역시 기금 운용의 유연성과 다양성을 확보하고 새로운 기준과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 의원은 끝으로 "재난기금은 재난이 와야 쓰는 돈이 아니라, 재난을 막기 위해 먼저 쓰는 돈이 돼야 한다"며 "기후위기 시대에 걸맞은 선제적, 전략적 기금 운용 체계 정비가 시급하다"고 밝혔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광주일보 72년 호남 최대 부수·열독률 1위

주최 무안군 주관 무안군축제추진위원회

THE 28TH MUAN LOTUS FESTIVAL

제28회 무안꽃제

여름이 켜지는 순간, 무안에서

무안 SUM : ON

6.26. - 6.29. 무안군 회산백련지